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결
성장전략 TF
25-13-1
(공개)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2025. 12. 16.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I. 그간의 논의 경과	1
II.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2
1. 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체계	2
2.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	6
3. 초기 지원 프로젝트 고려요인	12
III. 향후 계획	13

I. 그간의 논의 경과

□ 9.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첨단산업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한 5년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기본계획 발표

-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500조원에 달하는 투자수요에 부응하고 전략적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경제성장 정책***

* 투자의 부가가치유발계수(0.83, 한은) X 150조원 = 약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 그동안 다양한 실무회의·간담회를 통해 금융·산업·지역 전반에 국민성장펀드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 **기관별 적극 참여의사** 발표

* 5대지주는 각각 73~95조원 규모의 생산적금융 공급방향을 발표(금융권 합계 526조원) ☞ 국민성장펀드에도 각각 10조원씩 참여하겠다는 청사진 제시

- 동시에 산업계 및 투자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체계(안)를 고도화

※ 9.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이후 주요 소통 노력

- ① 9.19일 금융위원장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등 ‘생산적금융 대전환’으로의 비전 제시
☞ “생산적금융”이 일종의 고유명사가 되어 ‘핵심 경제정책’ 브랜드로 자리잡음
- ② 10.1일 금융위 부위원장-산업부-과기부 3차관, 산업계, 금융권 간담회
- ③ 10.29일 금융위·산은-5대지주 등 금융권과 국민성장펀드 QA세션 개최
- ④ 10.31일 금융위 사무처장-사업부처-지방정부 대상 국민성장펀드 간담회
- ⑤ 이외 주요 첨단기업, 사업부처, 지방정부, 협회 등과 30회 이상 실무간담회

□ 11.17일 민간전문가 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을 출범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미있는 투자수요 발굴*

* 산업계·금융권·지자체·각 부처에서 총 153조원+@에 달하는 투자수요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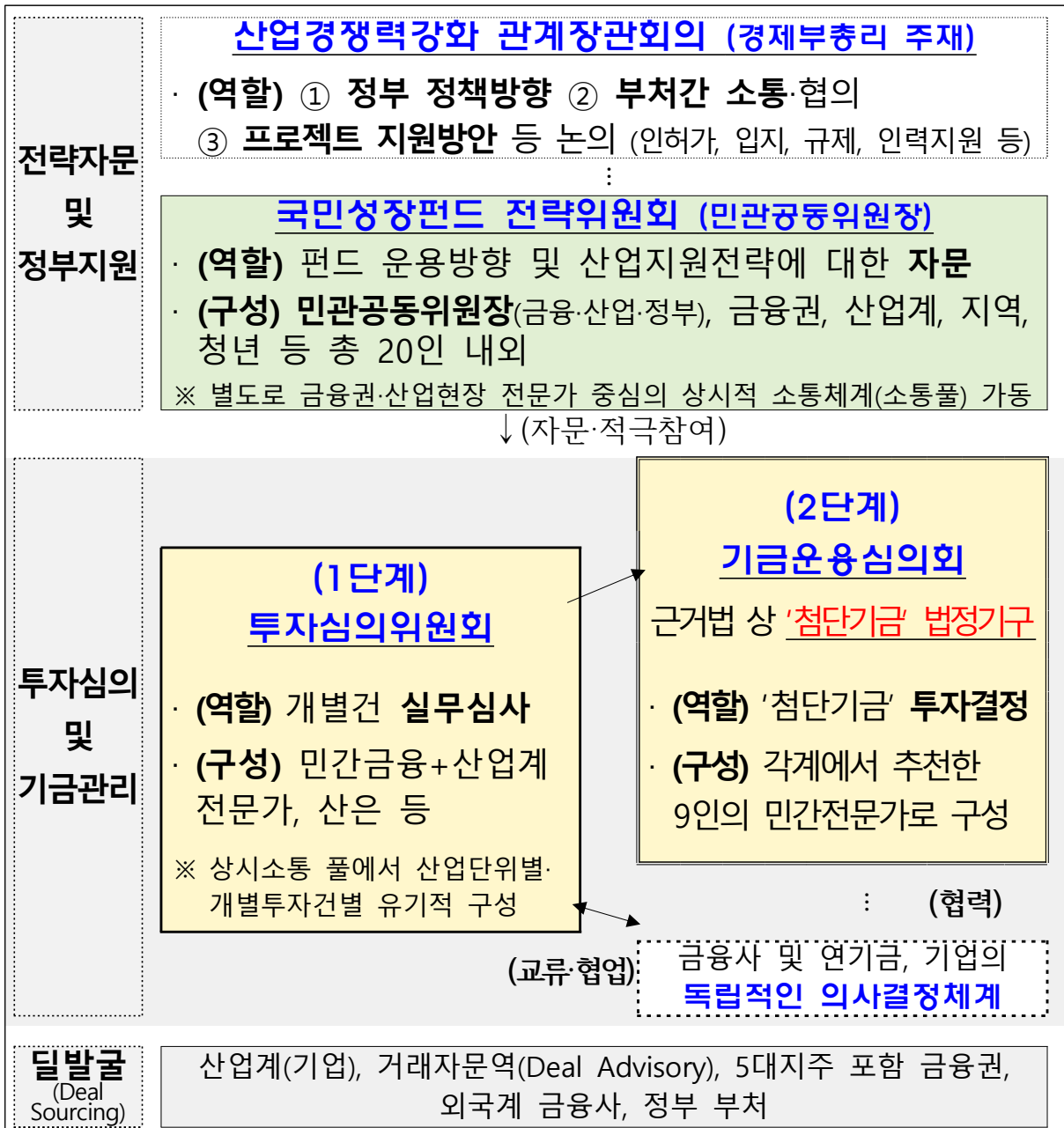
- 12.10일 출범 후 속도감있는 지원을 위해 산업계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요 메가프로젝트 후보를 검토하여 음

➡ 금융·산업계의 관심과 기대에 걸맞게 “20년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투명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26년 중 총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결정)해 나갈 계획

II.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1 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체계

- ◆ 향후 20년을 이끄는 유망한 미래성장엔진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금융·산업계 최고전문가가 의사결정체계에 참여 (**전문성**)
 - 각 계 전문가와의 상시적 소통망을 충분히 확보하되 개별 사안별 최적 전문가로 2단계 심사를 통해 신속 지원
- ◆ 운용방향 자문과 정책 지원사항 논의를 위한 회의체를 가동하고, 주요 운용성과 등에 대해 전문가 풀에 지속적 환류 (**공정성 및 투명성**)



◆ 투자심의회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2단계 심사 체계

□ **(1단계: 투자심의위원회)** 산업계와 금융계의 전문가, 사무국(민간) 등으로 구성하여 실무심사를 담당

○ 업종별로 (잠정) 5개 소위원회(분과)로 구분하여 민간전문가와 산은·민간금융권 및 지역관련 인사가 함께 심사

- 분과별로 고정된 전문위원과 함께 산업별(사업별) 전문가*를 끌고루 배치하여 의사결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

* 금융권·산업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광범위한 상시적 소통체계(소통풀)를 구축하고 개별 투자건별 또는 산업별 투자제안 건에 맞추어 심의위원을 유기적으로 구성

【산업별 소위원회 구분 (예시)】

소위원회(분과)	대상업종(총 13개 = 12개 + 인프라)
1분과 AI·로봇	AI·로봇
2분과 에너지·인프라	수소, 핵심광물,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3분과 반도체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4분과 모빌리티 등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방산
5분과 바이오 등	바이오·백신, 미디어·콘텐츠 분야

○ 신청기업 및 실무조직에서 작성·검토한 사업개요, 재무·손익 현황 등 사업계획서와 정책적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

- 특히, 민간금융사에서 발굴·제안된 사업의 경우 실무검토 및 투심위 단계부터 발굴사가 심의과정에 적극 참여

□ **(2단계: 기금운용심의회)** 첨단기금이 활용되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

○ 산은법 시행령에 의해 국회(2인), 관계부처(5인), 대한상의 추천 인사 및 산은담당 부문장 등 9인의 민간전문가 구성* (금융위원장 위촉)

* 기금집행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9인의 명단은 비공개 관리

○ 1단계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친 개별 투자건*에 대해 첨단전략 산업기금 투입여부를 최종 결정

* 직접투자·초저리대출·PF 및 프로젝트펀드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첨단기금' 투입 여부, 간접투자(펀드출자건)는 연간 운용방안에 대한 승인

※ 함께 참여하는 민간자금(공동대출에 참여, 공동지분투자 등)은 국민성장펀드와 협업하되 개별의 의사결정과정을 독립적으로 이행 (국민성장펀드 출자분으로 선출자하는 개념 아님)

◆ **민관공동의 전략위원회를 활용하여 전체운용방향 자문**

- **(전략위원회)** 산업계·금융권·정부 합동의 전략위원회를 두어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전략 및 재원배분 등에 대한 자문역할 수행 (20명 내외)
 - 식견·경험 및 전문성을 겸비한 산업계 및 금융권의 저명한 인사를 골고루 배치, 지역 및 청년창업가 등의 생생한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
 - 주기적(예: 반기별)으로 운용사항 등을 점검, 운용전략을 수정·고도화
- **(산경장*)** 정부의 정책방향 및 부처간 소통 조율(장관급협의체)
 - ☞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사항 논의(규제·인허가 등)

*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주재의 관계부처 장관 회의체

◆ **의사결정의 실무지원을 위한 민관합동·부처합동 조직 운영**

- 부처합동 국민성장펀드추진단(정부)과 사무국(민간) 운영
 - **(정부: 추진단)** 국민성장펀드를 정책·전략차원에서 보좌하면서 범부처 협업과제 및 프로젝트별 토털솔루션 제공
 - * 부처합동 조직으로 '국민성장펀드' 운용기간 동안 한시적 운영, 민간전문가 채용
 -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조하여 사업별 금융구조(사업별 재정 후순위 보장계획 포함)를 검토하고 적극행정(면책 등) 지원
 - **(민간: 사무국)** 산업·금융권, 산은의 전문가 중심 실무 집행조직
 - 회계·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채용 중이며, 금융지주 등에서 10여명 이상 파견 예정 ☞ 최고의 민간 전문가가 실무단계부터 함께 참여

※ '사무국'의 적극적인 임무수행과 우수한 민간전문가 유치를 위해 사무국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총인건비 예외사유 인정('정부정책상 특별히 인정')

- 이와 함께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이행 우수기관 인센티브(26년 신설) 적극 활용
 - * '2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25.12.10) :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이행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가능

<참고> 프로젝트 발굴 및 민관부처간 협업체계

(1) 프로젝트 발굴

□ 국민성장펀드의 투자프로젝트는 산업계, 금융권 및 사업부처가 효과적으로 인지 ➡ 각 주체가 익숙한 채널 최대한 활용

- 사업부처는 '추진단'을 통해 사업신청 및 검토
- 산업계 및 거래자문역*(Deal Advisory)은 '사무국' 및 '추진단'에 프로젝트 신청 (기존네트워크 적극 활용)

* PwC, Deloitte, EY, KPMG 등 주요 회계법인 또는 McKinsey, BCG 등 컨설팅펌 등

- 산은 및 지주·증권·보험사 등은 '국민성장펀드 Alliance'를 구성하여 프로젝트 발굴 및 국민성장펀드-금융권간 협업 지원

※ 국민성장펀드 추진단과 사무국은 신청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신청채널에 따른 유불리가 없도록 관리

(2) 국민성장펀드-정책기관·펀드 간 협업 추진

□ [관계부처(추진단)] 중기부 '모태펀드', 각 부처 산업육성을 위한 '섹터펀드' 등과 영역구분하되 효율적 지원이 되도록 협업 강화

- 모태펀드는 창업초기·벤처기업을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 생태계의 스케일업 및 대규모 인프라·설비투자 지원
- 각 부처별 섹터펀드(바이오, 콘텐츠 등)에 유망 투자건이 있는 경우 국민성장펀드 매칭 등 지원하여 협업방안 논의

□ [정부-정책금융]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정책금융기관간 협업 추진

* 구성 : 금융위(부위원장 주재)-사업부처-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 등)

- 예) 국민성장펀드로부터 대규모 자금지원을 받은 대기업이 신보 등 정책기관과 협약 프로그램* 마련하여 중소 협력업체 등 지원

* 대기업이 임의출연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협력업체에 특례조건의 대출보증 지원

2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

◆ (주요 지원방향)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①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 ② 관련 벤처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③ 지역성장

□ (지원방식별) '26년 국민성장펀드는 총 30조원 이상 운용

○ 민간자금은 첨단기금(15조원)과 재정을 마중물로 유치할 수 있는 최소 수치로서 사업별 조달구조에 따라 확대 가능

○ 30조원보다 수요가 많더라도 적극 승인하여 초기 지원효과 극대화*

* 설비투자 등이 장기간 소요되는만큼 투자(승인)액이 30조원보다 크더라도 '26년 중 실제 집행액은 30조원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자금의 지원방식별 국민성장펀드 지원규모】

방식별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투융자	초저리대출
	3조원	7조원	10조원	10조원
규모	기금 1.5조원 +민간 1.5조원	기금 1.5조원 +민간 5.5조원	기금 2.0조원 +민간 8.0조원	기금 10.0조원 (산은 역마진 감수)

* 재정은 1조원 규모로 민간자금 투자를 지원(후순위 보강 또는 마중물 지원 등)

□ (산업별) 그간 산은의 포트폴리오, AI 산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 ☞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

○ (예) AI 6조원, 반도체 4.2조원, 미래차·모빌리티 3.1조원 등

□ (생태계 전반 지원) 첨단전략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펀드 등을 통해 중소·기술기업 전반 지원

○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활용한 기술기업 투자('26년 8,000억원), 데카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첨단기업에 적극적 지분투자

□ (참여기회 확대) 민간자금 중 일부는 국민참여형 공모펀드를 통해 모집 ☞ 첨단전략산업을 통한 성장의 성과를 함께 향유*

* 국민참여형펀드의 참여유인 제고를 위해 후순위 보강 및 세제혜택 부여 검토

□ (지역) 발전소, AI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사업, 지역전용 펀드 등을 통해 전체 조성(목표)규모의 40%인 12조원 이상 지역에 투입

① [자금지원 개요]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폭넓게 지원

□ (지원대상) 첨단전략산업기업^① + 관련 밸류체인 전반^②(관련기업)

① 첨단전략산업법 + 조특법 + 시행령 ☞ 12개 산업* 및 생태계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시행령 - 콘텐츠·핵심광물 등)

② 장비공급, 설비구축, 에너지 발전·송전 등 인프라, 거래상대방

□ (메가프로젝트)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 발굴

○ 범부처 합동의 추진단 및 민간 전문가의 사무국을 중심으로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에 이르는 통합패키지 지원

□ (자금지원) 과거 산은의 포트폴리오, AI 산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 ☞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

○ (지역) 5극 3특 등을 고려하여 40%인 12조원 이상 지원 노력

○ (중소중견) 수출·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충분한 효과(연간 10조원 이상)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직·간접투자 및 초저리대출을 활용한
첨단기업 시설지원 시 국내 소부장 장비활용 확대 유도

【국민성장펀드 산업별 배분 (☞한도 개념 아니며, 산업현장 수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

구분(단위 : 조원)	투자중심 지원		인프라투융자	초저리대출	합계
	직접지분	간접투자			
AI	0.8	1.2	2.0	2.0	6.00
반도체	0.32	0.86	8.0	3.0	4.18
이차전지	0.26	0.82		0.5	1.58
디스플레이	0.10	0.22		0.2	0.52
바이오·백신	0.28	0.54		1.5	2.32
수소·연료전지	0.16	0.26		0.2	0.62
항공우주·방산	0.22	0.3		0.2	0.72
모빌리티	0.18	0.9		2.0	3.08
미디어·콘텐츠	0.28	0.54		0.2	1.02
로봇	0.12	0.2		0.1	0.42
원전 등 관련	0.28	0.16		0.1	0.54
합 계	3.0	약 7.0	10.0	10.0	30.0
(재원)	기금	1.5	2.0	10.0	15.0
	민간	1.5	8.0	-	15.0

* 간접투자액에는 산업별 별도 배분없이 운영하는 국민참여형펀드 금액 포함

② [직접투자방식] 성장·기술기업 증자참여 및 M&A 지원 등

□ (개요) 시장성 차입·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증자에 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증자 참여

-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지분투자의 당사자가 되어 해당 기업 및 민간금융권과 함께 증자 또는 기술기업인수(M&A)

□ (규모) 3조원 (기금 1.5조원 + 민간자금 1.5조원) ※재정 1,500억원 별도

- 기업이 투자유치시 민간과 기금이 지분투자자로 공동 참여
- 재정(산은 경유출자)은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마중물 참여

【직접투자방식 승인 절차】

※ ① 개별 기업/부처/금융사의 딜 발굴(Deal Sourcing) → ②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및 사무국의 실무검토* → ③ 민관합동의 '투자심의위원회' 심사 → ④ 기금 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투자 확약서(LOC) 발급

* (추진단) 정부정책지원 및 재정참여 금액 검토, (사무국) 금융 실무심사

※ (투자수요 접수된 사업 예시) 차세대 AI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로봇 생태계를 위한 SPC 설립, 중소기업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

③ [간접투자방식] 첨단기금과 민간자금 합동의 대규모 펀드 조성

□ (개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 연기금, 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여 정책목적에 맞는 지분투자 집행

- (자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민간 운용사의 선구안을 활용하여 첨단산업육성 및 개별 자펀드의 정책취지에 맞는 투자 집행

【간접투자방식 승인 절차】

※ ① 정책성펀드 운용계획(목적별 자펀드 운용계획 및 마중물 비중 등) 기금운용 심의회 심의·의결 → ② 운용계획에 맞추어 모펀드 운용사 및 자펀드 운용사 선정 → ③ 민간운용사가 민간금융사 및 연기금 등의 자금 유치 → ④ 운용사가 주목적투자 등 정책취지를 준수해가면서 개별 펀드 운용 (투자 및 회수)

※ 프로젝트 펀드는 개별적인 대규모 투자대상(민간운용사 발굴)에 대해 '첨단기금'의 참여여부를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

□ (규모) 7조원 (기금 1.5조원 + 민간자금 5.5조원) ※재정 4,500억원 별도

① (정책성펀드: 총 5.6조원)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 지원

- 블라인드펀드 3.9조원(70%)과 함께 프로젝트펀드 1.7조원(30%) 도입* ☞ 건당 투자규모가 큰 메가프로젝트에 민관합동 참여

* 과거 혁신성장펀드는 연간 3조원을 모두 블라인드펀드로만 구성하였음

- 블라인드펀드는 벤처·혁신기업·스케일업 및 지역산업 지원* 등 정책 목적을 반영하여 기금과 재정을 마중물(후순위)로 민간자금을 유치

* 지역산업전용펀드 1,800억원(재정포함시 2,000억원) 포함 (5년간 1조원 이상)

- 부처별 펀드와 협업하여 사업부처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
- 공공자금(재정+첨단기금+산은) 비중을 평균 40%까지(최소 20%)높여 민간금융회사의 위험·출자부담(RW 등) 경감

② (국민참여형: 6,000억원^{예시}) 일반국민이 직접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하여 첨단산업의 성장성과를 함께 향유

- 재정 후순위 보장 및 세제혜택 제공 추진(☞ '26.1분기 세부방안 별도 발표)

【 '26년 총 7조원 간접투자방식 운용계획(안, 억원) 】

구분 (펀드조성목적)	목표조성 (A+B)	첨단전략 산업기금(A)	민간자금 유치(B)		재정투입액 (후순위 or 마중물)	비고
			산은 등	민간금융 연기금(최소)		
간접투자방식 전체	70,000	15,000	10,500	44,500	4,500	
① 정책성펀드	56,000	8,700	10,500	36,800	2,500	
블라인드펀드	39,000	5,000	9,800	24,200	2,500	
산업전반지원	24,100	1,800	6,500	15,200	1,600	5~10%**
스케일업전용	5,000	600	1,100	3,300	300	(후순위/마중물)
개별산업지원	4,600	1,100	1,200	2,300	400	17%
지역전용	1,800	500	500	800	200	25%
부처사업지원	3,500	400	500	2,600	-	
프로젝트펀드	17,000	3,700	700	12,600	-	
② 국민참여형 펀드	6,000 ^{예시}	300	-	(국민)5,700	1,200	후순위 20%
③ 초장기기술투자펀드	8,000	6,000	-	2,000	800	후순위 40%

* 산은·민간운용사 등이 함께 그간의 정책펀드 운영, 정책방향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분규모(안)을 검토

** 후순위 또는 초과이익이전 옵션 중 민간운용사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블라인드 펀드 3.9조원의 개별 펀드별 구성】

펀드 종류	주목적 지원대상	목표규모	비고
첨단산업전반 지원 범용펀드	12개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폭넓게 지원 (기존 혁신성장펀드 흡수)	2.41조원	10개 내외 민간 운용사를 선정·운용
스케일업전용	첨단산업의 스케일업지원 집중 (건당 100~1,000억원 투자)	5,000억원	투자건 당 평균 지원금액 큼(200억원↑)
섹터펀드	반도체 소부장·AI 생태계 집중 (기존 반도체생태계펀드 흡수)	4,600억원	
지역전용펀드	지역첨단산업에 집중지원하는 전용펀드 조성	0.18조원	재정포함시 2,000억원 지역산업생태계 집중
매칭펀드	타 부처 정책성펀드와 협업 (컨텐츠, IP, 바이오 등)	0.35조원	부처별 섹터펀드와 협업·효율적 활용

③ (초장기투자: 8,000억원) 첨단산업 유망기술기업 등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도록 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신설

- 민간 출자보다는 ‘첨단기금’의 출자비중을 크게 높이고(75%) 높은 위험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준의 재정 후순위 보장(40%)

□ (성과평가 및 정책펀드간 협업체계) 정책성펀드의 운용성과에 대해서 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공개하여 투명성 강화

-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및 ‘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점검하고 중기부 (모태펀드**), 복지부 등 부처별 개별펀드와 협력 강화·효율성 증대

* 사업부처 정책과 정책금융(산·기은, 산·기보) 공급의 연계강화를 위한 주기적 회의체

** 금융위-중기부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중소기업애로점검협의체’를 실장급 협의체로 격상

□ (펀드정비) 기존 정책성펀드는 국민성장펀드 중심으로 정비

- 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펀드 등을 국민성장펀드로 흡수*

* 반도체생태계펀드, 원전산업성장펀드, AI 생태계펀드(산은자체)는 추가조성 중단
☞ 이미 조성된 건에 대해서는 투자목적에 맞추어 산업현장에 충분히 제공

- 다만,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케일업펀드는 별도 신설(5,000억원)하여 산업전반에 대한 스케일업 지원

※ 국민성장펀드 5,000억원 + 별도 스케일업 펀드 5,000억원 = 1조원(5년 5조원)

- 또한, 산은 자체재원으로 자금회수펀드*를 별도 조성(5년간 2조원)하여, 초기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통한 투자-회수 생태계 지원

* 세컨더리 및 M&A 지원, 기존 펀드의 LP지분, 구주 등 매입 전용펀드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한 정책성펀드 정비】

기존 펀드(2025년 조성 기준)			국민성장펀드 중심으로 펀드 효율화		
펀드명	규모	구분	펀드명	규모	구분
혁신성장펀드	3조원	재정 + 산은	국민성장펀드 민간운용사 발굴사업 지원 프로젝트펀드 (1.7조원) 포함	7조원* (과거 유사성격 3.9조원)	재정 + 산은
· 혁신산업펀드	· 1.5조원				
· 스케일업펀드	· 1.5조원				
반도체생태계펀드	1,200억원				
원전산업성장펀드	1,000억원	산은	스케일업펀드	5,000억원	산은
AI생태계펀드	5,000억원				
회수지원펀드	5,000억원	산은	회수지원펀드	5,000억원**	산은
합계	4.22조원		합계	8.0조원*	

* 신설되는 국민참여형(0.6조원), 초장기기술투자(0.8조원), 프로젝트펀드(1.7조원) 제외시 3.9조원 (총 금액 4.4~4.9조원) ☞ 유사성격의 정책성펀드 규모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

** 5년간 2조원 조성을 목표로 '25년 조성분의 투자진행상황을 보아가며 조성

4 [인프라투융자] 생태계 전반을 위한 전력망·발전·용수사업 지원

□ (개요) 첨단기업·벤처사·기술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 기금과 재정은 고위험 지분투자 및 후순위 대출 참여, 민간은 공동대출 형태 참여 (민간자금과 함께 PF방식으로 지원)

□ (규모) 10조원 (기금 2조원 + 민간자금 8조원) ※재정 4,000억원 별도

○ 첨단기금과 민간금융권이 금융지원구조를 만들어 함께 참여

○ 재정(산은 경유출자)은 PF구조에서 민간자금의 (후순위) 출자자로 기능 또는 민간 공동대출의 후순위 보강재원으로 참여

【인프라 투융자방식 승인 절차】

※ ① 개별 기업/부처/금융사의 딜 발굴(Deal Sourcing), 사업구조 및 금융구조 제안 → ②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및 사무국의 실무검토* → ③ 민관합동의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④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대출·출자) 집행

* (추진단) 정부정책지원 및 재정참여 금액 검토, (사무국) 금융 실무심사

※ (투자수요 접수된 사업 예시) 평택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사업, 국가 AI컴퓨팅센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등

5 [초저리대출] 대규모 설비투자 및 R&D 자금을 2~3%대 초저리 지원

- ☐ (개요) 대규모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2~3%대 국고채 수준 지원
- ☐ (규모) 10조원 (기금 10조원)
 - 국고채수준의 초저리대출은 민간금융권에서는 역마진으로 인해 참여 곤란 ➡ 첨단기금에서 담당하고 역마진은 산은이 감당
 - 다만, 자금수요가 매우 큰 경우 민간은행에서도 공동대출(신디케이션 론)형태로 참여할 수 있음(국고채보다는 금리 수준이 높음)
- ☐ (지원조건) 신규시설자금 및 장비구매자금 + R&D용 자금 대출
 - * 단순 운영자금 또는 기존차입금 상환목적 자금은 원칙적으로 제외

3 초기지원 프로젝트 고려요인

- ☐ 국민성장펀드의 투자자금이 '26년초부터 현장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적극소통 지속 (30여차례 고위·실무간담회)
 - 사업부처·지방정부·산업계 등으로부터 11월말까지 총 100여건, 153조원+@ 규모의 투자수요 제출 ➡ 개별 사업 검토 중
 - 투자수요는 대·중견·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등 다양하게 접수
- ☐ 개별 건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합동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첨단산업육성 및 금융기관의 생산적 금융 역량 동시 제고

<초기 지원가능 프로젝트 고려요인>

- ①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중소·중견, 전후방 기업 등 해당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
 - ② 지역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③ 산업계·금융권 등 다수 기관이 협업·참여하여 향후 펀드운영에 있어 모범·선도사례(Best Practice)로 벤치마크 가능
- (+ 사업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펀드운용 초기 투자집행 가능)

III. 향후 계획

① 12월 중 거버넌스 구성·위촉 완료 및 본격 가동

- (12월중)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위촉하고(금융위원장)
 - 투자심의위원회 및 상시적 소통 풀 구성·가동(유연하게 운영)

②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

- (12월중) 1차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국민성장펀드 2026년 운용계획 확정

③ 개별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등

[직접투자, 프로젝트 펀드, 인프라투융자 및 초저리대출]

- (연중) 직접투자, 인프라투융자, 초저리대출, 간접투자방식 중 프로젝트펀드에 대한 출자 제안 → 투자심의위-기금운용심의회 절차는 연중 수시 진행

※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출자·융자업무에 대해 면책특례 적용 검토
☞ 금융회사 등의 국민성장펀드 참여 활성화

[정책성 펀드 운용]

- (정책성펀드 운용)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데 일정 시간 소요
☞ 모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부터 조속한 시일 내 개시
 - (12월말) 정책성펀드 운용방안에 대한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직후 모펀드 운용사 선정절차 개시 (공고)
 - (상반기) 모펀드운용사에 따른 자펀드 운용사 선정
→ (하반기) 자펀드운용사의 펀드결성을 위한 민간자금 모집절차